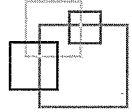


## 2004년 도서관계 10대 뉴스



한 해를 정리한다는 것은 지난 일들을 되짚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잘 한 것은 그 의미를 다시 즐기고, 아직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잘 하려는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우리 도서관계도 모두 2004년 올 한 해 또 부지런히 살아왔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 도서관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지 다시금 돌아 볼 일이다.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도서관 스스로 자신의 오늘을 잘 알고, 그를 통해 더욱 더 국민들 가까이 다가가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올해도 2003년과 같이 우선 《圖書館文化》 편집실에서 2004년을 장식한 많은 사건이나 소식 중에서 22가지의 후보를 골랐다. 이것을 바탕으로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설문조사 방식으로 도서관계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는 《圖書館文化》 편집실과 다소 다른 점이 있기는 해도 대체로 우리 도서관계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실에서 최종적으로 “2004년 도서관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전체적으로 즐거운 뉴스보다는 다소 우울하고 힘들었던 사건들이 많이 선정되었다. 139명의 설문 응답자 중 무려 129명이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던 사실을 선택했다.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도서관계가 겪고 있

는 어려운 취업환경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내려는 시도나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없는 것은 아쉽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올해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꾸준히 사서교사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고, 또 학교도서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이미 법안을 만들어 국회와 협의 중이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되지 않은 문제가 정식으로 제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는 사실에서 우리 도서관계는 우리의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략과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역시 같은 과제를 남긴 사건은 문화관광부 조직개편으로 도서관정책부서가 폐지되고 정책입안과 추진이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나뉘는 일이다. 이러한 방침을 2003년 7월부터 인지하고 몇 번의 반대 의견 제시와 정부당국자와의 면담이 있었으나 결국은 정부의 방침을 막아내거나 수정하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물론 국립중앙도서관이 정책의 중심에서 부각된 것은 도서관 정책과 집행을 도서관이 직접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고민했어야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그 대안과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실천되었어야 할 일이다. 역시 우리 도서관계 역량을 되돌아보게 한 사건이었

다. 그리고 보니 유독 올해는 2003년부터 시작된 일들이 2004년에도 그대로 도서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생각된다. 올해부터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고 2005년부터는 전면 실시될 예정인 시점에서 이에 따른 도서관 휴일 개관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협회도 현재 도서관의 현실과 지향을 고려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한 10월 도서관 대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세션은 발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은 도서관인의 관심이 모아졌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가 휴일이 될 경우 도서관은 이 두 날 모두 개관해야 하는가? 물론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이용자들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휴일에도 개관해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하다. 그러나 도서관 직원들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도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직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서비스를 강요할 수는 없다. 이 딜레마를 풀어낼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은 무엇일까? 아직도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올해가 가면 이제 어떤 선택이든 해야 할 시간이 더 가까워진다. 마음이 분주해 진다. 올해를 뜨겁게 달군 사건의 하나는 '도서관 디지털 도서 전송·출력에 대한 보상금 제도' (소위 '도서관보상금제도'를 협회에서는 이렇게 부르자고 제안한 바 있다)가 2003년 7월 1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올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작년 말 제도 설명회에서부터 시작된 대학도서관들의 제도 시행 반대 움직임은 결국 올해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조직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위원회는 성명서와 도서관의 행동지침 등을 마련하여 대학도서관들의 반대를 조직화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도서관들이 실제로 원문자료를 이용하지 못하여 도서관과 이용자, 저작권자까지 불

편을 겪고 있다. 또한 원문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법적 요구를 수용한 도서관들과의 갈등 요소도 내재되어 있어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 되고 있다. 물론 법이나 제도에 있어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다. 다만 더 깊이 있고 진지한, 그러면서도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혜와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연말에 대책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저작권과 등 관계당국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조만간에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기를 바랄 뿐이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문제가 또 다시 도서관계를 우울하게 했다. 위탁 운영 중인 목포시립도서관에 대해 목포시의회가 직영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안산시에서 1개 도서관을 다시 민간위탁하겠다고 나섰고, 연말에 운영할 단체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말하면서 한 편으로는 그 핵심이라고 하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 늘 불안요소를 만들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가 안타까울 뿐이다. 도대체 언제쯤이나 우리 도서관인들은 도서관다운 도서관에서, 도서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날 수 있을까?

위에서 정리한 몇 가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회도서관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장에 도서관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지지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또 다시 연말을 앞두고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이 관장으로 임명됨으로써 도서관계의 기

대가 무너져 버렸다. 또 한 번의 좌절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도 하지만... 이같은 상황을 언제쯤에나 극복할 수 있을까. 다음을 기대해 본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건도 있었다. 우선 2002년 새로운 도서관 발전 방안이 제시된 이후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제시된 시안과 같이 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광역대표도서관 설치라든가 실천력을 갖춘 국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사항은 새로운 도서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아직 관계당국에서 논의 중이다. 내년에는 이 법 개정이 10대 뉴스로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03년을 뜨겁게 달군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의 영향은 2004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기적의 도서관이 4개관이나 개관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부문에서도 어린이도서관을 새로 설립하거나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도 국립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계획을 밝히고 있어 어린이도서관 활성화는 계속해서 우리 도서관계의 핵심적 사건으로 회자될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계기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받아들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부천시 등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어, 향후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

끝으로 10대 뉴스에 문화관광부가 우리 협회

의 의견을 들어 사서수당 현실화 의견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선택되었다. 1982년 이후 줄곧 변함이 없었던 사서수당은 이제 사서직의 정체성이나 자긍심에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우리 협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수당의 현실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문화관광부가 수당 현실화를 위해 나섰으나, 결국 좋은 소식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사서들의 자기 존엄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사서인 나는 누구인가? 2005년에 좋은 대답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10대 뉴스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으로는 우선 사회적으로는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와 함께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의 위상을 좀 더 강화했다는 것이다. 2003년에 이어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여러 도시로 확산되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들과 서울문화재단, 우리 협회가 함께 추진한 '책 읽는 서울'이라든가 우리 협회가 9월 추진한 청소년 대상 책읽기 캠페인 '친구야, 함께 책 읽자!' 등의 프로그램과 우리 협회가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출판사 등의 협조와 지원으로 실시한 '도서관에서 과학자/작가를 만나다'라는 프로그램 등이 도서관이 지식정보시대의 핵심 요소인 책 읽기를 선도하는 궤도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데 기여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2004년 9월 15일 장서 500만권을 넘어섰다. 이날 도서관은 대통령 영부인을 모시고 기념식을 가졌다. 5월에는 경북대학교 도서관이 서울대학교에 이어 200만 장서를 넘어섬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도서관들도 장서 규모에 있어 의미있는 성과를 보여주게 되었다. 일부 공공이나 대학도서관에서 일반자료실 이용시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무인좌석발급기 도입과 CCTV 설치 등이 이용자들에 의해 문제제기되었고, 국가인권위원

회가 개입하면서 이제 도서관에서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개인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도서관의 중요성이 오히려 부각된 계기라는 생각도 해 본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던 도서관 운영 지원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의 장서구입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공공도서관들은 앞으로 자료구입비 확보가 어렵다는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 책을 살 수 없는 도서관이 생기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크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동부산대학 문헌정보과가 학생수 부족 등의 이유로 폐과가 된 사건이다. 현장의 위축으로 졸업생들의 취업기회가 줄어든 것이 요인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교육과정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12월 중 인천지역에서 공공도서관 자원을 이용해 개인이 특정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유상의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이용한 유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논쟁이 있었다. 아직 확실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도서관 공간에서의 상업적 활동이 더욱 많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 정리와 함께 도서관 활동의 경제적 가치 증대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풀려갈 지 궁금하다. 그 밖에 2004한국건축대상에서 도서관이 3곳이나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건축적으로도 도서관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적의 도서관 3곳과 안양시립석수도관도 해당 지역에서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우리 협회 사무국장을 지

내고 마을문고 운동을 주도해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엄대섭 선생께서 작년 고 박봉석 선생에 이어 올해 역시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두 해에 걸쳐 도서관계 원로들께서 문화훈장을 받으신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을 반증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계속해서 그 동안의 도서관인들의 수고에 적절한 보상이 있으리라 믿는다. 올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동안 수집하지 못한 자료들의 수집을 목적으로 시작한 미소장 자료 수집 활동이 예상보다 큰 성과를 얻었다. 이 사업은 도서관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지식자원의 수집과 보존 활동에 있어 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일깨웠다. 앞으로 도서관이 장서를 그 힘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우리 협회와 관련해서 우선 1988년부터 16년간 격월간으로 발행되던 《圖書館文化》가 정부의 지원확대에 힘입어 올해부터 월간으로 발행되었다. 또한 『한국도서관통계』도 『한국도서관연감』으로 확대 발행되어, 도서관과 관련한 현황과 역사, 자료 등의 정리와 보급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의 제72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최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12월 3일 조직위원회 발기인 총회를 가졌고, 대회주제도 확정하였다. 또한 8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70차 WLIC에서 활발한 홍보활동도 전개해서 세계 도서관계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2006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기대를 가슴에 담고 2005년을 향해 2004년을 보낸다. 2005년은 우리 도서관계에 오직 희망과 즐거움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글 : 이용훈 협회 기획부장, blackmt@hitel.net]

###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문제 논란

7월 14일 김재윤 의원(열린우리당)의 14인이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 상정되면서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문제가 학교도서관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기존의 사서교사 등은 사서교사 배치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있으나, 그 동안 비정규직 형태로 학교에서 도서관 직원으로 일해온 사서 등은 '학교사서' 형태의 배치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서관계 내부 논란으로 확산되었다. 연말에는 학계가 공식적으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일은 5월 발표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중 정규직화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사서 1천여명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논쟁이 더욱 가열되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구체적인 추진 사례는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 문화관광부 조직개편으로 도서관정책부서 폐지

2003년 7월경부터 검토되기 시작한 문화관광부 조직개편 작업이 결국 2004년 11월 초 마무리되면서 1990년 문화부 출범 때 설치되어 도서관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도서관정책부서(도서관박물관과)가 폐지되고, 대신 정책업무는 문화정책과, 집행 등 여타 업무는 신설된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로 이관되었다. 도서관계는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주요한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도서관 발전을 위해 어떤 형태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겨졌다.

### 주5일 근무 확대에 따른 도서관 휴일 개관 문제 불거져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공영역에서의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올 해 휴일이 늘어나면서 도서관의 근무형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국립문화기관 현업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조정, 인력재배치, 자원봉사 활용 등 효율적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인력을 증원해 나가고, 공공문화시설에는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의 인턴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7월 1일 국회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지부 소속 노조원이 집회를 가지고 국회도서관 일요일 개관 폐지를 요구하며 주5일제 근무제 완전 쟁취 등을 결의사항으로 채택하면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도서관의 휴일 개관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한국도서관협회 등 도서관계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도서관 디지털 도서 전송·출력에 대한 보상금 제도 본격 시행

2003년 7월 1일부터 도서관 디지털 도서 전송·출력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가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들은 이 제도 시행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여 성명서 및 도서관들의 행동지침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도서관들에서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연말에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공대위에서 개정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빠른 해결책이 제시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추진

2003년에 2002년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시도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본격적으로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문화관광부 시안이 발표되면서 도서관계에서도 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법안은 국회에도 전달되어 검토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작업을 시작했으나 연내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어린이도서관 건립 붐 지속

2003년 기적의도서관 사업으로 시작된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 붐이 2004년에도 지속되었다. 기적의도서관도 2003년 3개관에 이어 2004년에는 4개관이 추가로 개관하였으며, 2개관을 건립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한국마사회 지원을 받아 2004년에 3개관의 어린이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하반기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방침을 밝히고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 국회도서관장의 전문가 임명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그 동안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도서관들의 관장에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던 차에, 6월 25일 문헌정보학계 8개 학회가 성명을 내고 국회도서관장을 문헌정보학 전문직 인사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결국 12월 초 국회의장은 새 국회도서관장에 또 다시 정치인을 임명함으로써 도서관계의 기대를 무산시켰다. 향후 도서관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문제 다시 불거져

한 동안 확산되지 않고 정체상태를 보이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문제가 2004년 하반기에 다시 불거졌다. 우선 목포시의회가 위탁 운영 중인 목포시립도서관 운영이 파행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시 직영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공식 채택하였으나, 이에 대해 시에서는 위탁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

다. 한편으로 안산시의 경우에도 3개관 중 관산도서관을 민간에 운영 위탁하기로 확정하고 운영할 단체를 설정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도서관계가 더 이상 반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이 같은 상황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민간위탁 도서관의 파행적 운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 문화관광부, 사서수당 현실화 의견 중앙인사위원회 제출

문화관광부(도서관박물관과)는 한국도서관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6월 24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 게 사서수당 현실화를 건의하였다. 사서수당은 1982년 설치이후 현재까지 2만원(5급이상 3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는데, 도서관계 일각에서는 사서직의 전문성과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수당이 턱없이 낮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도서관계의 주요 현안의 하나이다.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건의한 개선(안)은 공무원 직급별로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수혜대상도 기존 사서직 공무원(사서직 군무원)만 해당되던 것을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사서교사 및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활발

공공도서관 확충과 함께 기존의 도서관 관련 시설이나 문고 등의 활성화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이미 문화관광부의 계획에서 주요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부천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도 작은도서관 건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근접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는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도서관과 연계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여 총 25개의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였다. 이 사업은 6월 8일 문화관광부가 밝힌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 비전에는 아파트 단지나 농어촌 등에 주민들이 찾기 쉬운 30여평 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지금보다 7,600개 늘려 총 1만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도 100개의 작은도서관 설치를 공언하는 등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확충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